

#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방위산업 영향 및 대응 과제<sup>1)</sup>

### 요약

향후 선진국의 방산 공급망이 회복되며 글로벌 방산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요 경쟁국들의 국내 정세와 안보 기조, 방산수출 전략 등은 국내 방위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2024년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의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본고는 미국 대선의 향방이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미국 대선의 시나리오를 바이든 재선과 트럼프 당선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미국 방산정책의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바이든 재선 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등 현재 추진 중인 한·미 방산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크라이나 지원 역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방산 수요가 지속되면서 국내 방산수출 역시 당분간 호조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대조적으로 트럼프 당선 시 동맹국과의 협력보다는 자국우선주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와 함께 한·미 방산협력이 후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혹은 중단으로 글로벌 방산 수요의 후퇴가 불가피하며,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완화로 해당 지역에서 미국 업체와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방산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대선 결과 예측이 어려운 만큼 미국의 정치환경 급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조가 요구된다. 최근의 수출호조 지속을 위한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미 방산협력 기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미국과의 방산협력 및 수출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미국이 다시 고립주의로 선회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1) 본 원고는 「미(美)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2024) 보고서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 1. 머리말

최근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글로벌 방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방산수출 수주가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2023년 한국의 방산수출 수주액은 약 140억 달러로,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현재 수출 호조가 지속될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남중국해 긴장 등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며 글로벌 방산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도리어 글로벌 방산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방산 시장 공급망 회복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은 국내 방산수출의 주요 위협요인이다. 선진국의 방산 공급망이 정상화될 경우, 그동안 국내 방산수출의 강점으로 작용했던 가성비, 납기경쟁력 등의 우위요소가 빠른 속도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방위산업은 수출 대상국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이 높은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

NATO, AUKUS<sup>2)</sup> 등 동맹국 중심의 방산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 또한 미국을 제외한 공식적인 동맹국이 없는 한국에게 부담 요인이다.

정치적·외교적·경제적 요인이 방산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주요 경쟁국의 정치환경 변화는 국내 방위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2024년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의 결과는 국내 방위산업에 지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미국의 방산정책은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구도, 수출입, 투자 등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미국 대선의 향방이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3자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일종의 군사동맹. AUKUS는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고(필러 1), 일본과의 AI 기술 공동개발을 추진하는(필러 2) 등 동맹국 간의 방산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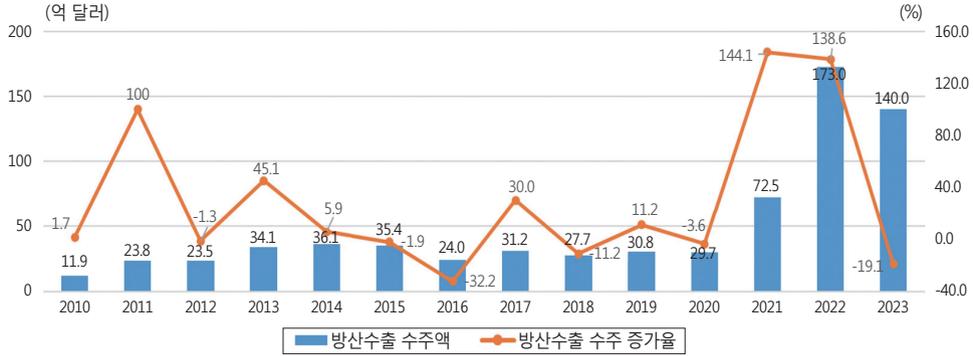
## 2. 국내 방위산업의 최근 현황

두 개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고 글로벌 방산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한국의 방산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국내 방산 기업들은 가성비와 빠른 납기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방산수출

수주액은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한국은 주요국 중 최근 5년간(2018~2022년) 방산수출이 크게 증가한 국가 중 하나로 거론된다.<sup>3)</sup>

3) Economist(2023), "Meet the world's new arms dealers", 19th September.

〈그림 1〉 국내 방산수출 수주 추이



자료: 산업연구원.

〈표 1〉 무기 체계별 국내 방산수출 현황(2010~2023년)

	주요 수출 품목	주요 수출 국가
화력	레드백 장갑차, K-9 자주포, 권총탄, 탄약류	미국, 핀란드, 폴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항공	KT-1 기본훈련기, KA-1, T-50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페루, 태국, 이라크, 세네갈, 필리핀, 폴란드
함정	1,400톤급 잠수함, 전투함, 호위함, 군수지원함, 해안경비정, 함정전투체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태국, 영국, 노르웨이, 필리핀, 페루
유도	천공-Ⅱ, 현공, 해성, 천무	UAE, 사우디아라비아
기동	장갑차, K-2 전차, 군용차, 파워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필리핀, 폴란드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현재의 수출 호조가 지속될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NATO 회원국들은 GDP 대비 2%의 방위비 지출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며 글로벌 군비 지출 확대를 주도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만, 남중국해 등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에 대응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국들의 국방비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 방산수출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과거와 대비하여 수출 권역과 품목이 보다 다양해졌다. 수출 권역은 과거 아시아, 북미 중심에서 최근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수출 품목은 과거 탄약, 함정 중심에서 최근에는 기동, 화력, 항공, 함정, 유도무기 등으로 다각화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방산수출 수주가 급증하면서 국내 기업의 투자도 함께 늘고 있다. 기업들은 주로 생산라인 확대와 신규 공장 건설에 투자하고 있으며, 과거 대비 설비투자의 정부의존도가 낮아지고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증가하는 중이다. 과거 국내 방산 설비투자의 정부의존도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수출 확대와 기업의 자발적 투자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가 조성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2〉 국내 방위산업의 주요 투자 계획

- 한화시스템(2022), 경북 구미에 2,000억 원 투자(중장기 생산능력 확보)
- 한화에어로스페이스(2024), 창원 3사업장 생산라인 확대(K9 자주포 수출)
- LIG넥스원(2022), 구미공장 생산라인 증설에 1,100억 원 투자(천궁-Ⅱ 생산)
- KAI(2023), 경남 사천 공장 생산라인 증설 검토(FA-50 수출, KF-21 생산)
- 풍산(2023), 폴란드 탄약공장 건설 검토

자료: 언론자료 종합.

### 3. 미 대선 시나리오에 따른 미국 방산정책의 변화

현재의 수출 호조와 투자 확대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에 따른 수출 기회 확보가 점쳐지나, 자국 이기주의와 고립주의에 따른 불확실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자신의 공약을 담은 ‘어젠다 47’을 통해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과 국방비 증액,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을 공언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외 방산환경의 급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바이든 재선 시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겠지만 한·미 방산협력 강화 등 기존 정책들의 색채가 한층 더 선명해지면서 국내 방위산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미국 대선의 시나리오를 바이든 재선과 트럼프 당선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미국 방산정책의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시나리오 ①: 바이든 재집권

바이든 정권이 재집권할 경우 현재 한국과 추진 중인 방산협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국방부 공급망 보고서는 반도체, 배터리, 극초음속 미사일, 단·주조 등을 자국 공급망의 취약 분야로 지목하고,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동맹국과의 방산협력 추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sup>4)</sup> 따라서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의 경쟁력이 높은 산업들을 중심으로 협력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양국이 추진 중인 RDP-A 역시 바이든 정권 재집권 시 발효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미 방산협력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sup>5)</sup> 등 원자재 리스크 대응을 위한

4) 심순형·김미정(2022),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5)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미국, 한국,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핀란드, 호주 등 참여(외교부, 2022).

〈표 3〉 미국의 주요 공급망 정책

항목	주요 내용
주요 문제점	- 규모의 경제 미흡 - 기업의 이탈에 따른 해외 의존도 상승
취약 분야	- 유도무기/배터리/단조 및 주조/반도체
주요 정책	- 미국 내 생산 역량 확충 - 동맹국과 협력 강화/동맹국의 우수 민수 기업 유치 촉진(반도체)
대중 견제 조치	- 중국산 희토류가 포함된 F-35 인수 거부/중국산 희토류가 투입된 무기체계 생산 규제 법안 제출 - 중국산 상용품 수입 규제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양국 간 협력 또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정권이 동맹국과의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만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동맹국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바이든 정권 역시 동맹국이 방위비 지출 확대를 주문하고 있으나, 트럼프 정부와 같은 노골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

바이든 정권이 트럼프와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이는 문제는 우크라이나 지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에 약 9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sup>6)</sup>, 법안 통과 이전에도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2억 달러 규모의 군사지원을 발표하는 등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동맹국의 안보 불신을 해소하고 자유주의와 규칙 기반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바이든 정권이 트럼프와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6) AP(2024), "Biden says the US is rushing weaponry to Ukraine as he signs a \$95 billion war aid measure into law", April 25th.

국내 방산수출에 긍정적인 신호 중 하나는 바이든 정부 집권 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인권 침해, 중국과의 밀월 관계 등을 이유로 반도체, 방산물자 등의 대(對)중동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동 지역에서 미국 방산 업체와의 경쟁이 완화되면서 국내 방산기업에게 수출 기회가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바이든이 재집권 할 경우 중동에서의 수출 호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동 지역 수출 시 인권 등 ESG 리스크와 외교적 갈등 문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의 수출통제(E/L)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sup>7)</sup>

## (2) 시나리오 ②: 트럼프 집권

바이든 정부와는 달리 동맹국과의 방산협력보다 자국 중심의 방위산업 공급망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에 따른 한·미 방산협력 후퇴가

7) 선진국의 부품을 탑재한 무기체계를 수출 시 당사국에게 수출 허가(Export License)를 획득해야 하는데, 중동 지역 수출 시 선진국이 수출 허가를 거부할 가능성이 존재.

〈표 4〉 한·미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증가율	0% (1.04조 원)	13.9% (1.18조 원)	5.4%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적용		
적용 기준		7.4%+6.5%*	2021년 국방비 증가율			

자료: 외교부(2021),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최종 타결", 3월 10일.

주: \*2021년의 증가율은 국방비 증가율 7.4%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가산한 수치.

우려된다. 특히 미국 대선 이전에 RDP-A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미국산 부품이 포함되지 않은 방산물자에 대해 Buy American 규정을 보다 까다롭게 적용하는 한편, 국내 조달 및 R&D 시장의 강도 높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동맹국과의 협력보다는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트럼프 정권의 성격상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 요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 1기 당시(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5배 인상할 것을 요구(50억 달러, 약 6조 원)했으나, 실제로는 2021년 13.9% 인상 이후 국방비 증가율만큼의 분담금 인상으로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현재 제12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선 이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차기(제13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트럼프는 대선 유세에서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강조하고 있다.<sup>8)</sup>

동맹국과의 안보협력보다는 고립주의와 미국의 불필요한 희생 중단을 강조하는 트럼프는 집권

성공 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 혹은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정부는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축소로 NATO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압박하는 한편, 미국의 재정 부담 완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단, 혹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경우 글로벌 방산 수요가 급감하며 국내 방산수출 역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국가에 대한 수출통제 완화 역시 국내 방산수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집권 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바이든 정부가 인권 침해국으로 지정한 국가들에 대한 수출 통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 1기 당시 중동 지역으로의 방산수출이 늘어난 전례가 있다. 수출 통제 완화 시, 중동 시장을 둘러싼 미국 업체와의 경쟁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트럼프 정권에서도 국내 방산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국방비 증액이다. 2017년 임기 첫해 당시, 트럼프 정권은 국방비를 10% 인상한 바 있는 만큼, 집권 시 대대적인 국방비 지출 확대가 예상된다. 이 경우 국내 방산 기업에게 미국 시장 진입 기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8) 연합뉴스(2024), "트럼프, 주한미군수 또 잘못 언급하며 '韓, 방위비 낼 수 있다'", 5월 14일.

## 4.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영향

### (1) 시나리오 ①: 바이든 재집권

바이든 재집권 시 NATO 등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이 확대되면서 국내 방산수출 호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대(對)우크라이나 원조로 발생한 NATO 국가들의 전력공백으로 국내산 탄약·전차·항공기 등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방산수출 수주 증가로 투자 역시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국내투자도 증가세를 유지하겠지만, 해외투자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전차·자주포), 호주(자주포·장갑차), 인도(자주포)와 같이 구매 물량이 많고 자국 방위산업 육성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이 현지 생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해외투자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물론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수출의 파급효과 반감이 우려되고 있지만, 현지 생산을 위한 부품·구성품의 상당수를 국내에서 생산·조달해야 하는 까닭에 국내투자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한·미 RDP-A가 발효되며 양국 간 공동 R&D, 조달 시장 상호개방, 원자재 리스크 공동 대응 등 한·미 방산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 (2) 시나리오 ②: 트럼프 집권

트럼프 정권에서는 미국 방위산업 재건과 Buy-American 기조가 강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한·미 방산협력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미국과의 무기체계 공동개발, 미국의 방산 공급망 진입 등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미 방산협력이 좌초될 위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미·중 패권경쟁 격화로 중국산 원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으며, 희토류 등 방산물자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동 등의 지역에서 미국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방산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잠식당할 위험도 존재한다. 무기 수출에 따른 인권침해 및 전략무기 수출통제 문제보다 방산 업체의 이익과 고용 창출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정부는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 통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 1기 당시 의회와의 갈등을 불사하면서 대만에 패트리엇 미사일 등 전략무기 수출을 추진한 전례가 있으며, 이 시기 중동 지역 수출 역시 가파른 속도로 늘어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의 조기 종료에 따른 글로벌 방산 수요 급감 역시 국내 방산수출의 시장

〈표 5〉 미(美) 대선의 각 시나리오가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

	민주당-바이든 재집권	공화당-트럼프 집권
수출입	- 국내 방산수출 호조 지속	- 글로벌 방산 수요 감소로 수출 둔화 - 중동에서 미국과 경쟁 심화
국내외 투자	- 국내외 방산투자 증가세 지속	- 방위비 부담으로 투자 제동 우려
공급망·GVC	- 미국과 방산협력 확대	- 미국과 방산협력 후퇴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전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 지원이 축소될 경우에도 탄약 등을 중심으로 국내 방산수출이 둔화·정체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현실화된다면, 국내 무기 획득 예산이 제약되면서 방산투자 역시 함께 위축

될 수 있다.

단, 트럼프 집권 시 미국의 국방예산이 바이든 정부 집권 시기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국내 방산수출이 확대될 기회가 있다. 특히 미국의 국방비 증가로 고등훈련기·함정 사업 등에서 진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5. 국내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

바이든 정부가 재집권할 경우 공급망 협력, 원자재 리스크 공동 대응 등 기존의 양국 간 협력기조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방반도체,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공동 R&D 과제를 발굴하고 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협상을 추진 중인 RDP-A 타결에 대비하여 GP(Global Partnering) 사업, CMMC(사이버 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 상호인증 절차 구축 등 미국 방산 공급망 진입 지원정책도 요구된다. RDP-A 체결에 따른 잠재적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반면, 트럼프 정부 집권 시 미국이 자국이거주

의와 고립주의로 선회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대선 이전에 RDP-A를 체결하는 등 한·미 방산협력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분담 요구를 해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추가 협상안과 대응 논리 마련도 필요하다. 방산 수출 측면에서도 중동 등의 지역에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화된 수출전략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현지 제조업 육성 등 민간 산업협력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수주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트럼프 당선 시 희토류 등 중국발 원자재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는 대응책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

〈표 6〉 국내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

항목	주요 내용
한·미 방산협력 강화	-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미국 대선 이전에 체결하는 등 한·미 방산협력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조속히 매듭
범부처 수출지원 기동	- 동유럽 등 수출 유망국가들이 선호하는 기술이전·공동개발·현지 생산을 위한 범부처 지원
원자재 리스크 대응	- 희토류 등 중국발 원자재 리스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이상의 대응 과제를 종합하면, 미국 대선 결과 예측이 어려운 만큼 미국의 정치환경 급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조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수출호조 지속을 위한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미 방산협력 기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미국과의 방산협력 및 수출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미국이 다시 고립주의로 선회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동유럽 등 수출 유망 국가들이 선호하는 기술이전·공동개발·현지생산을 위한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선진국의 공급망 정상화로 경쟁이 다시 격화되는 시점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원자재 등 공급망 리스크와 한·미 방산협력 후퇴 위험에도 대응 매뉴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심순형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기계·방위산업실 부연구위원  
simsh@kiet.re.kr / 044-287-3214

「The Economic Impact of Korean Defense Exports and Its Challenges」(2023)  
「국내 주요 방산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와 발전 과제」(2022)